



| | |
|----|---|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사회부 |
| 발신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권오인 팀장, 정택수 간사 / 02-3673-2143) |
| 일자 | 2017. 1. 11 (수) |
| 제목 | [보도] 전경련 해체에 대한 30대 회원사 공개질의 (총5매) |

전경련 30대 재벌 회원사 대상 회원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삼성, SK, 현대차 등 탈퇴의사를 밝힌 3개 그룹 및 27개 주요재벌 그룹 대상 질의
- 전경련의 꼼수에 동조하여 회원탈퇴를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1.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KT를 제외한 많은 회원사들이 아직도 전경련 탈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회비납부 거부가 전경련 탈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사 탈퇴의사를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등 그룹의 총수가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탈퇴의사와 탈퇴일정을 질의하였으며, 27개 주요기업에 대해서는 탈퇴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답변은 1월 17일 화요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며, 회신결과는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표> 전경련 탈퇴 약속 이행 현황

| 기업 및 총수명 | 이행여부 |
|------------|------|
| LG 구본무 회장 | 이행 |
| 삼성 이재용 부회장 | 미이행 |
| 현대차 정몽구 회장 | 미이행 |
| SK 최태원 회장 | 미이행 |

■ 첨부 :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및 회원사별 질의내용

<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을 설립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1988년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대선 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비롯한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등 설립목적과 배치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버이연합 우회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에 연거푸 연루되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경련의 쇄신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도 국민여론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 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국민들의 전경련 해체요구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권력과 유착하여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전경련이 이제야 헌법의 뒤에 숨는다면 누구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최근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단설립이나 기부 등 논란이 된 기능을 금지하거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기능을 금지하더라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정경유착을 계속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변신해도 특정세력만을 위한 정책생산과 제도화에 몰두한다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체를 배제한 쇄신안은 모두 정경유착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와 KT를 제외한 많은 회원사들이 아직도 전경련 탈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회비납부 거부가 전경련 탈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지 않는 것은 상황만 바뀌면 언제든지 전경련의 정경유착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원사들이 국민적 우려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하루 빨리 전경련 탈퇴를 공식화하고 탈퇴시점도 명확히 공개해야만 합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 시국상황을 계기로 전경련은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한 구시대의 유물이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경련의 버티기나 꼼수에 동조한다면 작금의 뜨거운 국민적 분노는 곧 재벌과 전경련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경련 회원사들의 조속한 전경련 탈퇴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며, 아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발신대상 30대 그룹 및 질의내용

1) 총수의 전경련 탈퇴약속 미이행 그룹(3개)

- 발신 대상 : SK그룹 최태원 회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 질의 내용

◎ 언론에 의하면 청문회에서 탈퇴의사를 밝힌 기업 중 LG만이 공식적인 탈퇴절차를 밟았으며, 삼성·SK·현대자동차 등은 회비납부 및 활동중단 외에 공식적인 탈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귀사의 회장님께서 청문회를 통해 전경련 탈퇴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원사 탈퇴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데 명확히 회원탈퇴의사여부를 체크해주시시오.

- 1) 탈퇴할 것이다.() 2)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 3) 기타(_____)

1-1. 탈퇴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 전경련을 탈퇴를 이행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기해주시길 바랍니다.

(_____)

2) 탈퇴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그룹(27개)

- 발신 대상 : CJ그룹 손경식 회장, GS그룹 허창수 회장, KCC그룹 정몽진 회장, LS그룹 구자열 회장, OCI그룹 이수영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교보그룹 신창재 회장,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 코오롱그룹 이용열 회장, 한국타이어그룹 조양래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김남구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현대중공업그룹 최길선 회장, 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 회장,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한진중공업그룹 조남호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 질의 내용

1. 귀사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여, 전경련에서 탈퇴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2. 탈퇴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끝>